

윤 대통령 'WP 인터뷰' 발언 '일파만파'

민주당 "무능한 굴욕외교" "억울하면 녹취내용 틀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무능한 굴욕외교라 평가하며 실용외교를 촉구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내용 중 '100년 전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정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화했고 대놓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기사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의원 90여 명은 직접 참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공약대책위원회·강제동원 의원모임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사민-연합뉴스)

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발언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고 번역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일공약대책위원회, 강제동원 의원모임 등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이후 독일은 지난 19일 게토봉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 또 다시 사과했다. 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하고도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이유"라며 한일관계를 독일과 유럽에 빚댄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국어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그리고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희 대일공약외교 대책위원장은 "여당에서는 영어로 번역해서 오역을 했다"며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격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오늘 워싱턴포

스트지(WP) 기자가 원문 그대로 보여 주며 주어 빠졌다 그렇지 않다 그대로 공개한다며 보여줬다"며 "바이든·날리먼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WP지 24일자 보도의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because of what happened 100 years ago' 기사 부분을 꼬집었다.

김홍걸 의원도 "오역이라 자꾸 주장하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건 대통령실이 녹음을 다한다"며 "더 이상 해명할 게 있다면 자기들이 녹음해놓은 것 틀어서 온 국민들에게 들려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정윤 기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촉구

이강구·신성영 인천시의원 대통령실 앞 출근길서 시위

인천시의회 이강구(국·연수5·사진)·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신성영 의원을 필두로 시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외교부 직원의 '재외동포청 유치는 서울이 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온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자 인천시의회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 때까지 매주 평일 오전 7~9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숙원사업이자 재외동포들의 열망인 만큼 반드시 인천 유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외동포청은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정부 등에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의 작은 실천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동료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대한민국 유일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는 우리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고 합리적인 사실"이라며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온 만큼 재외동포청 발표 지연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 때까지 인천시의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매일 두 시간씩 대통령님께 전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안종삼 기자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발언'에 법안 발의까지

분쟁지역 군사지원 관련 '국회 승인 의무화' 발의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정부가 분쟁지역에 군사지원 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간사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쟁지역에 전투 장비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무기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한 군사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

표했다. 또 김 간사의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 군사지원 제공 시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날 김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 만 발을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155mm 포탄 보유량은 30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데도 50여 만 발이 국외로 반출된다면, 우리 군의 보유량은 20일 치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간사는 "155mm 포탄을 무턱대고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고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사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전쟁 얘기를 꺼내면서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정윤 기자

국회에서도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논의

다음달 2일 국회서 토론회 경기도 국회의원 48명 참여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다음달 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발전 비전 등 전략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고영인, 권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울), 김상희, 김성원,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문정복, 민병덕, 박광운,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조승천, 최준용,

최준식, 한준호, 홍기원, 홍정민 경기도 국회의원(가나다 순) 48명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개편 가능성과 국경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회는 윤호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경기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중첩된 규제도 낙후된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독자적인 비전 수립이 가능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감대를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창 기자

송영길, 민주당 탈당계 제출

민주당 긍정적 반응 속 국민의힘 '양심도 없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인터넷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당 대표 전당대회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책임은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사퇴 수습을 위해 24일 프랑크 파리에 귀국했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 후 "검찰이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연루 의혹에 정면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그의 결정에 말을 아끼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누가 송영길에게 돈을 던지겠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하니 이쯤 되면 반성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니면 민주당 모두가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던질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을 맹목했다.

홍정윤 기자

경기도의회 소식

특버스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영 의원



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버스는 대중교통 불편 및 부족한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파주시(교하·운정)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지난해 시범운영했으며 교통국 2023년

수입 △특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 요금에 관한 사항 △차량 예약·배차 정보 제공,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약자 이용편의 기능을 포함한 경기도 특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주요 거점 내 단말기 설치,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특버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타 면제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민주당, 김포4·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 수단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

선·GTX 등과 연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광역철도 교통수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확대

이서영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국민의힘, 비례·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유지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외협력 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창 기자